

평화적 통일을 생각한다

박 권 상*

— 목 차 —

1. “통일”이라는 이름의 게임이론
2. 국제정세의 획기적인 전환
3. 통일접근의 내재조건
4. 남한의 서독화를

1. “통일”이라는 이름의 게임이론

게임 이론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있다. 같이 범죄를 저지른 두 容疑者가 拘束되어 따로 따로 검사의 取調을 받게 된다.

그들은 각각 그들이 끝내 自白을 거부할 경우 두사람 모두 1년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사람이 다 자백하면 두사람 모두 7년형, 한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한사람이 자백을 거부하면 전자는 풀려나고 후자는 최고 12년형을 받게된다.

여기서 「자백」이 두사람에게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쪽이 자백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자기는 釋放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7년)이 되므로 밀쳐야 본전, 매도 같이 맞는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逆說的인 사실은 상대방을 믿지 않고, 또는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極大化(석방)하려고 할 때 다같이 엄청난 피해(각각7년형)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끝까지 서로가 信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냐에 있다. 불행히도 이 게임 이론은 바로 한국의 統一問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 言論人·전 동아일보편집국장

만일 남북이 다같이 처음부터 분단을 인정하고 사이 좋게 平和共存을 택하고 그럼으로써 훗날의 숙제로 접어들때 거기서 입는 손해는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상호협력형에 해당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에 성의가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체제이므로 전쟁의 위험이나 軍備競争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고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統一은 민족의 지상과제」이고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급선무」라는 대의 명분을 설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 흡수되는 통일만은 절대 거부하는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어느 한쪽이 비평화적 수법으로 가령 전쟁이나 혁명으로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경우 힘이 모자라는 쪽이 物理적으로 敗北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불안의 벽이 더욱 높아진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 통일과는 더욱 멀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1950년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6·25전쟁을 벌여 공산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죄수의 딜레마」 가운데 그들한테 최상이졌으나 민족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만일,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던들 “북은 석방되고 남은 12년형”을 복역하는 사태가 벌어졌었고, 만일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던들 국민은 정반대로 한국의 통치권이 두만강·압록강에 미쳤을 것이다. 한쪽의 최선이 다른쪽의 최악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현재 미·소를 맹주로 하는 동서냉전은 남북한 어느일방이 다른일방을 물리적 힘으로 흡수하는 그런 통합을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아전인수격으로 오판하였다. 그러므로써 미증유의 골육상잔과 국제전쟁을 유발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1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낸 6·25전쟁은 국토분단을 고정시키고 말았다. “상호불신형”으로 “각각 7년형을 사는” 고역을 치루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분단된 상태로 45년간을 살아왔다. 서로를 인정하고 안하고 그것은 제2차적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실체가 엄연히 한반도에 존재하고 불행히도 피를 흘리며 서로 싸웠고, 전후에도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치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인정한다고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한다고 있는 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엄청난 규모의 군대로 허허실실 상대방의 약세를 노리는 대결로 일관하였다. 독일사람들은 동서로 갈라 살았지만 사이 좋게 살다가 국제정세가 허락하자 곧 통일하였다. 우리는 남북이 갈라선지 45년동안 민간차원에서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장의 편지도 오고갈 수 없는 대치상태를 벌이고 있다.

이제, 이렇듯 우둔하고 소모적인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세계대세가 그렇고 역

사의 흐름이 그렇고 거래의 뜻이 그렇다. 우선 대담하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럼으로써 분단이 가져온 고통을 더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만일 '통일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서둔다면, 그 결과는 어찌될 것인가.

비극적인 현실은 相互信賴없이, 참된 平和共存의 정치없이 무조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딜레마이다. 평화공존이나(전쟁) 統一이나의 택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자를 동시에 놓고 따질때 생기는 딜레마가 아닐까.

현실적으로는 우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交流와 合作으로 평화적共存을 먼저 다져놓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統一을 이룩하는 현실적인 길ियो, 知慧라고 말할 수 있다.

2. 국제정세의 획기적인 전환

유럽에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역시 급속한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엄두도 못내던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한낱 탁상공론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로 지평선 멀리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적어도 통일의 외적 조건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전후 45년간의 미·소틀 두축으로 하는 냉전구조 속에 남북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흡수, 통합하는 제로섬게임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한반도는 미소양대 강국의 전략적 가치 뿐만 아니라 이웃 중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한반도 남단 부산에 붉은 깃발이 펄럭거리는 공산통일은 일본열도에 비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 미국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반면에 압록강과 두만강가에 미국의 성조기가 휘날리는 한반도 통일 역시 중국이나 소련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안보상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이 남긴 교훈이다. 다시말해, 미·소틀 맹주로 하는 동서진영이 예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 남북한은 동서냉전에 있어 전진기지로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각각의 안전은 미·소라는 후견 국가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미·소가 직접 붙어 싸운다는 것은 필연코 핵전쟁을 뜻하고 인류의 파멸로 직결될 수 있었으므로 한국전쟁후 40년간 전쟁도 아닌,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의 출현과 1989년에 일어난 동구권의 자유혁명은 동서냉전을 일거에 종결시켰다. 제2차대전이 히틀러 등 파시스트체제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면, 히틀러가

붕괴됨으로써 총소리가 멎었듯이, 전후 냉전이 순전히 스탈린의 공산주의 때문에 생긴 이데올로기전쟁이었으며 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에 스탈린주의가 붕괴되자 냉전상태의 원인이 제거된 것이다. 소련의 막강한 무장력으로 지행해온 동구 여러 나라가 고르바초프의 묵시적 승인아래 민족자결과 민주주의 혁명의 길을 택하였다. 동서냉전의 실질적 힘이었던 바르샤바 군사조약기구가 지난 3월로 해체됨으로써 적어도 유럽에서의 냉전구조는 산산조각이 났다.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이 지배한 동구권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혁명적인 전환을 단행하였고, 소련제국이 존재하는 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독일의 통일이 90년 10월 삼시간에 이루어 졌다. 소련이라는 군사적 초강국이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경제적인 멸망에 이른다는 자각속에 고통스런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 대변혁이다.

91년 8월19일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도전하는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는 소련에서의 공산당 종말이라는 경천동지할 변화를 자초하였다. 소련의 민주주의 혁명은 단시일내에 가라앉을것 같지는 않다. 74년간의 공산독재가 붕괴되고 공산당과 비밀경찰이 지배한 "소비에트 연방" 조직이 해체의 진통을 겪고 있다. 동구권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들의 대부분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른 자치독립을 원하고 동시에 민주화와 시장경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74년간 맺어진 정치·경제 공동체였던만큼, 뿔뿔히 헤어질는지 느슨한 국가연합이 될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중앙통제가 살아남는 연방일는지, 이 시점에서 소련의 장래를 점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소련과 유럽의 공산주의는 같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란 자본주의에서 떠나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고통스런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스탈린주의식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생겼던 냉전구조는 무너졌고 유럽은 고르바초프가 말한 "하나의 공통된 집"을 향하고 있다.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두 기둥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동부아시아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화의 방향은 같다. 새롭게 형성될 국제적 신질서의 성격은 아직 선명하게 부상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도 명백하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각각 전초기지로 하는 대결구조는 말소되고 미·소가 다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련공산주의의 멸망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단히 유익한 외적 조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소련의 급속한 접근 및 협력관계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전면 붕괴를 뜻한다.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를 38도 선에 분할한 당사자요, 1948년 김일성 정권성립의 산파역이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을 사주하고 지원한 중주국이었으며, 아직도 북한과 군사동맹

을 맺고 있는 후원국이 아닌가. 그러나 지난 1년반동안에 한·소간 국교정상화가 되었으며 두나라 수반이 세번이나 만나 이지역의 평화증진과 경제기술협력관계를 의논하였다. 소련으로서는 동맹관계의 짝을 북에서 남으로 바꾼 인상을 풍길 정도가 아닌가싶다. 국제관계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것, 오직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이치를 실감케한다.

소련공산주의 몰락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궁지에 몰아넣고 따라서 정치·군사분야에서 두나라를 더욱 유착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담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서방측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원조,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흑자(91년도에 110억달러 예상)등 중국은 서방세계와의 긴밀한 협조 없이 경제적 근대화는커녕 존립자체가 어렵다. 그런뜻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교류가 급진전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협력을 진요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것도, 북한의 "하나의 조선"이라는 허구예찬 논리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것도 따지고보면 중국의 현실주의 노선때문이었다. 북한은 지난 5월27일까지만해도 유엔동시가입은 "역사앞에 분열고착의 책임을 지게된다"고 우겨왔지만, 한국의 유엔가입에 거부권행사를 거부하겠다는 중국의 통고에 어쩔수없이 동시가입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단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의 강화는 예견되지만, 그러나, 경제개혁이라는 중국의 국가이익상 한국에 대한 접근은 돌이킬수없는 대세로써 이미 무역대표부가 서울과 북경에 각각 설치되었고 각료급 접촉이 잦아지는등 현실을 토대로 국교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보지 않을수 없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뚜렷이 냉전의 청산과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소련에 이제 정치·경제·국제관계를 의존할 수 없고, 파탄난 경제를 되살리는데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교육지책으로 평양정권은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성취시키려는 의도하에 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정세는 전후 45년간의 반목과 대립의 구질서에서 벗어나 평화적 공존 협력이라는 새질서로 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한가지 분명한 흐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데올로기의 낡은 껍질을 벗고 모두가 실리추구를 기본목표로 삼고 연평합중(連平合從)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이제 말로만 "하나의 조선"이라는 스스로의 도그마에 집착할 뿐, 유엔동시가입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축진은 "하나의 조선"정척이 그들 스스로의 국제적 고립화를 심화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역시 "새로운 현실"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국제흐름에 적응못하면 자

떨할 뿐이다. 시대착오적인 1인 승배제도가 영속될 수는 없다.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스탈린체제도 끝장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3. 통일접근의 내재조건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평화지향적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일성집단조차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밖으로 일본·미국등과 접근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고 안으로 한국과의 접촉, 체육·문화의 교류뿐만 아니라 총리회담등 정치회담을 열고 있다. 분단 45년에 비로서 「괴수의 딜레마」에서 보는 "상호협력형"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후로 볼 수 있다. 분단은 고통스럽고 불안스럽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써의 신뢰를 구축, 분단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더는 것이 낫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 이른바 평화공존의 세대가 열려야 한다. 남북간에 기본조약이 성립하고 불가침조약을 맺고 상호방문등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소모적인 군비경쟁의 지양 내지는 군비축소단계에 이르면 평화공존의 기풍이 마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공존체제가 물을 잡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의 길로 들어섰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북한이 유엔동시가입을 수락하고 제한된 범위내나마 남쪽과 접촉 교류 협상한다고 해서 그들의 헌법과 노동당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대남적화노선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유엔동시가입이 결정된 후에도, 소련에서 쿠데타가 실패하여 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린 다음에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호"를 절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스탈린주의 통제하에 있는 북한이고 보면 소련과 동구권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제한된 문호개방이고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제파탄을 막자는 교육지책에서 나오는 현실인정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김일성의 사망과 그로말미암은 체제개혁이 이루어질때까지 인내심있게 기다려야 한다. 나는 1년전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 동부베를린을 방문, 동독 공산당의 후에 「민주사회당」의 부당수 앙드레 브리교수를 만나 "한반도에서도 독일식 통일이 가능할 것인지"에 그의 견해를 물어본 일이 있다. 그의 아버지가 북한주재대사로 근무한바 있고 그 역시 북한에서 2년간이나 살았던 정통공산주의자인데, 그의 답변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한반도에서도 독일과 같은 진전이 있을 수 있다. 民主主義를 부인하는 北韓의 스탈린주

義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南韓이 진정으로 民主主義적 발전을 추구할 결심과 능력을 갖춘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統一에의 지름길이 된다. 民主化와 시장경제의 동반이 없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北이 民主主義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로 발전, 거기서 남과 북에 공통의 기반이 생기고 그 단계에 가서야 두지역간에 진정한 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北韓사회가 강제로 모든 人民을 참여시키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고 창의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제약된 정체사회이며 “전혀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고 “金日成이 죽거나 지도자의 변화가 있으면 견잡을 수 없는 지리멸렬 상태가 벌어진다”고 확신한다. 결국 南과 北이 동질성을 찾고 평화스럽게 더불어 사는 기술을 익히는데는 오랜 세월을 요하고 양쪽에 「民主化」라는 공통분모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言則是也라 할까, 그의 말에 버릴데가 없다. 우리로서 통일을 가져오는데 추구할 당연한 원칙을 말한, 그러나 그것이 北과 45년간이나 同志的 관계에 있던 東獨공산주의자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뜻이 있다. 그와 비슷한 견해는 지난 4월 서울을 방문한 前 北韓주재 동독대사 한스 마레츠키 교수의 입에서도 반복되었다. 87년부터 작년까지 평양에 있었던 東獨의 마지막 대사였던 마레츠키교수는 서울대학에서 행한 강의에서 「현재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에 비추어 볼때 韓半島의 통일은 北韓의 근대화가 가능한 향후 30년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현재 南北韓 관계는 통일전 동서독 관계보다도 군사 정치적 대립이 심각하고 상호불신의 벽이 높다」고 말하는 등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적한대로는 지난 1년간 남북통일에 접근하는 주변정세가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南北韓 공존시대가 급속도로 문을 열고 있다. 다분히 우리의 北方 정책과 자유화를 향한 소련 및 동구권에서 일어난 지각변동이 가져온 것이지만 韓蘇가 修交했고 北이 美·日에 접근하고 폐쇄적인 北韓社會가 서서히 문을 열어 남북한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 교류가 조심스럽게 진전되더니, 北韓은 45년간 고수해온 「하나의 조선」이라는 허구의 논리를 포기하였다. 가장 수구적인 북한 김일성 정권도 中蘇및 동구권의 개방화 정책에 밀려 더딘 발걸음이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 북한 역시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할 수 밖에 없다. 소련 중국 및 동구권의 변화에 비추어 북한 역시 시대착오적인 1인 승배체도가 영속될 수는 없다.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스탈린체제도 끝장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렇다고 반세기에 걸친 분단민족 통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동독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통일에의 공통기반이 다져져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토대로 독일이 통일된 것이고 장차 서방의 유럽공동체가 동구권을 흡수

하여 「유럽공통의 집」으로 통합될 것이다.

우린 통일 역시 기본원칙과 방향은 동일하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남북 두지역에 각각 구축될 수 있다면 상부구조인 정권의 통합 역시 용이한 과제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느냐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멎고 다같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4. 남한의 서독화를

북한을 45년간 지배한 김일성체제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안보인다. 한사람의 "수령"을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고 국가대소사를 전적으로 그의 판단, 그의 지시에 따라 2천만 전체인민이 따라가는,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사회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점, 공산주의의 유럽에서의 전면실패를 입증하였다. 중국서도 정치적 통제하에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말하자면 대만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권위주의적인 다원주의"의 도입이다. 정치는 공산독재인데 경제는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모순이다. 그러나 어느정도 경제수준이 상승할 적에 국가통제가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에서 밝혀진바 있다. 중국이 일본·미국등과 경제교류를 긴밀히 하므로써 활력있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한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는 필연의 세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일의 문제다.

그렇게 될때 인구2천만의 북한의 스탈린주의체제가 얼마 못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의 2후전국인 초대강국인 중·소가 자유화로 가는 데 약소국인 북한이 언제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할 수 있을까. 당분간은 모르지만 명년이면 만 80세가 되는 김일성이 사망할때 북의 체제에는 큰 혼란이 온다. 그리고 북의 혼란이 루마니아식으로 유혈참극을 초래하는지 동구권 다른 나라들 같이 비교적 평화스런 변화를 이룰지는 예측할 길이 없다. 그러나 어느 노선을 택하든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조만간에 자유화의 길을 걷게 된다. 언젠가,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다른 공산국가가 밟았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3년이 걸릴는지 30년이 걸릴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북한의 "동독화"를 인내로써 기다리고 가능하면 부추기여야 한다. 그러나 동독의 민주화는 서독이 발하는 자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85년 8월 서독의 통일에 관한 독일 사람들의 의증을 타진한 일이 있다. 모두 비관적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가·학자·언론인·관료등을 만나 빠짐없이 통

일문제를 물어 보았고 동 서독 관계를 취재하였는데, 제마다 입장에 따라 다소 견해가 다르게 표현이 틀리지만, 그러나 공통점 몇가지가 있었다.

독일의 재통일은 소련제국이 붕괴되든가 동서 두 진영의 화합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즉 통일을 막는 저해 요인은 독일사람들 스스로에 있다기보다는 미·소 두 나라를 포함한 외부조건에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독일민족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따라서 주변 국가들이 통일독일의 출현에 거의 본능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형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베를린의 시의회 부의장 알렉산더 롱구리우스는 "만일 독일 사람에게 자기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결권이 부여된다면, 통일은 바로 다음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서가 합의하고 주변 국가들이 동의할 때까지 통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련이 강력한 독일의 출현을 허용할 까닭이 없다. 비판론이었다.

그렇다고 분단을 고착시켜 민족의 이질화를 방지할 수는 없다. 동서 화해를 동·서독이 앞장섬으로써 비록 분단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분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고통을 조장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느니보다 한 민족 두 체제라는 현실을 상호 인정하고 경제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록 상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형제의 관계로 발전시킨다. 절대로 다른 국가와 동일시 할 수 없는 특수관계를 맺겠다는 동일성 회복의 논리다.

그렇다고 통일에의 꿈을 버린것은 아니다. 범유럽의 대탕트를 촉진함으로써 소련제국이 붕괴되든가 아니면 미·소 화해로 말미암아 미·소 군대가 유럽에서 철수하는 경우등, 통일에의 객관적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꾸준히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 상황을 당시로서는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에 중지부는 없다. 역사의 과정은 변화로 표시되고 역사는 중부 유럽의 운명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바이츠 제커 대통령의 견해이다.

나는 독일에 있는 동안 서독의 국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구 6천만의 서독은 인구 2천만 미만의 동독을 압도하고 있었다. 우선 경제력에서 비교가 안되었다. 그러나 보다 우세를 보이는 것은 정치체제였다. 연간 5백 50만의 서독사람이 동독을 사사롭게 방문하였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국민의 85퍼센트가 서독 TV프로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독에서 서독을 방문하는 것은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이상 그 이하의 사람은 관혼상제 등 특별허가를 받는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었으니 자유체제와 독재체제의 강약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가. 동·서독간에 누구나 다이알만 돌리면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사이였지만, 대부분의 통화는 서에서 동으로 거는 것이었다.

왜, 이렇듯 서독은 자신만만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스 겐서 서독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말한 몇마디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히틀러의 독재체제에서 겪었던 가공할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높였다. 민주주의체제는 경제적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정의가 분명히 정치적 안정의 전제가 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동서체제간의 경쟁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 즉 그 최대한의 자유를 시민이 누리게 하는 체제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이다.”

최대의 자유야말로 체제가 승리하는 길.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신있는 이야기인가.

나는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에 앞서 남한이 서독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우리 노력에 따라 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군사적으로는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한, 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서독이나 남·북한이나 이것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사회적 정의가 분명히 정치적 안정의 전제가 된다는 견해”가 서독에서처럼 남한에서도 구현되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회체제가 이 땅에 구성될 때, 인구 2천만의 북한이 계속 “남조선의 혁명”이라는 환상에 집착할 수 있을까. 적어도 동독은 서독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대하는 가운데 비현실적 통일을 부르짖지 않았다. 늘 두개의 독일을 고집하는등 수세였다. 동독은 인구수틀 비롯하여 어느 모로 보나 도저히 서독을 당할 수 없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없단 말인가.

평화통일의 선행단계는 참된 평화공존의 구현이다. 서로 사이 좋게 더불어 사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한, 평화적으로 공존할 용의는 생길 수 없다. 모든것에 앞서 미군철수를 고집하는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고찰해야 한다.

결국, 남한의 서독화야말로, 다시말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토착하는 정치안정과 경제번영이야말로 평화공존을 정착시키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의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